



# 주간 통일정세

2013-09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4회 연속 軍시찰 주목…"무력시위 의도"(2/26, 연합뉴스 등)**
  -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연일 군부대를 집중 시찰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지난 21일(북한 매체 보도날짜 기준) 올해 들어 첫 군부대 시찰을 재개한 이후 1주일도 안 돼 네 번이나 군부대를 잇달아 찾았으며, 네 번째 군부대 시찰 소식은 26일 나옴.
  - 김 제1위원장이 포병부대들의 실전능력을 검열하려고 포병 화력타격훈련을 명령하고 현지에서 훈련을 지도했다는 내용으로 이번 군시찰에서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다그쳐 적과의 대결전에서 한몫 단단히 해야한다"(인민군 323군부대),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 박차를 가해야한다"(630대연합부대)며 호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냄.
  
- **北, 전방위 '핵보유국' 표현…"核국가 지위 굳히기"(2/26,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제14차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북한 김금옥 선수의 경기장면을 묘사하며, "핵보유국의 기상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를 높여나갔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전함.
  - 정월 대보름 소식을 전하면서 "(주민들이) 핵보유국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한 긍지를 안고 정월 대보름을 즐겁게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도 소개함.
  - 노동신문을 비롯해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각종 매체는 25일 하루에만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13편 이상 쏟아냄.
  
- **北 김정은, 쿠바 라울 카스트로에게 재임 축전(2/2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재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6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당신이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국가평의회) 위원장(의장)으로 다시 선거된 데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며 "나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밝힘.

● **北김영철 정찰총국장, 강등 3개월 만에 대장 계급 복귀(2/26, 연합뉴스; 노동신문)**

- 작년 말 대장에서 계급이 강등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영철 북한군 정찰총국장이 대장 계급을 달고 공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했다는 소식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2면에 전하면서 함께 게재한 사진 속에 대장 계급장 단 김영철이 일어서서 손뼉을 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시·도 당세포비서대회 개최(2/26,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전국의 노동당 말단 간부가 참가하는 '제4차 전당 당세포비서대회'에 이어 각 시·도에서 당세포비서대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평양시, 황해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남포시에서 시·도 당세포 비서들과 시·도 및 연합기업소 책임일꾼 등이 참가하는 세포비서대회가 각각 진행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전함.

● **北 김정은 핵실험 유공자와 기념사진(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에 참가한 유공자들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통신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한 지하 핵실험을 성공함으로써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과시하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준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꾼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힘.

● **北 농장에서 '포전담당제' 확산되나(2/27, 조선신보)**

- 북한 협동농장에서 가족단위 영농에 가까운 포전(圃田)담당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27일 올려 눈길을 끄.
- 이날 신문은 지난해 진행한 농장들의 사회주의 증산경쟁에서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3작업반 1분조가 전국적인 '본보기 분조'가 됐고 지난해 정보당 450여kg을 증산했다고 소개함.
- 이어 이 분조가 선진적 영농기술과 방법을 도입하고 지대적, 필지별 특성에 맞는 다수확 품종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여러 해 끈질긴 탐구



로 선정된 다수확품종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여 농장원들 모두가 분조 농사를 자기들이 책임졌다는 자각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 **北, 30년 만에 3대혁명소조 전국회의 개최(중합)(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지도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됐던 3대혁명소조 운동의 전국 단위 회의가 약 30년 만에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통신은 28일 '전국 3대혁명소조 열성자회의'가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전했으며, 이는 전국 규모의 3대혁명소조 회의가 열린 것은 1984년 9월 이후 처음임.
- **北 전역서 '식수절' 기념 식목행사 열려(3/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식수절'(3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북한 각지에서 식수행사와 켈기모임이 열렸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북한)에서 봄철 나무심기가 시작됐다"며 "김정은 원수님의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를 수림화·원림화하기 위한 켈기모임이 각지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통신은 평양의 만경대혁명사적지, 문수봉혁명사적지, 중앙식물원 등에서 농업근로자, 학생, 근로자,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원들이 각각 모임을 가졌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생일(1월8일) '軍 명절'로 지정 확인(3/3, 조선중앙TV)**
  - 북한이 대외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1월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조용히 보냈지만 북한군에서는 이날을 중요한 날로 챙기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1월과 2월 북한군을 현지시찰한 내용을 담은 '기록영화'를 새로 만들어 방영함. 이 영상물을 보면 한 군부대 식당에 붙어 있는 '병사들을 위한 날 운영계획'에 1월8일이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명절과 똑같이 표시돼 있음.
  - TV는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20일께 시찰한 인민군 323군부대 관하 4대대의 이 식당을 소개하면서 "식당에 들리신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께서는 '병사들을 위한 날' 운영계획을 보시고 지휘관과 군인가족들이 병사들을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바쳐가고 있는데 대해 기뻐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2.26,중통·중방·평방)
  - 최룡해·현영철·김격식·김영춘·리영길·손철주·렴철성·조경철·윤동현·김영철·박정천·윤동희·김택구·박동학·림광일·최부일·오일정·김경옥·리재일·라철일·홍영철 등 동행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공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관람 및 '감사' 전달(2.26,중통·중방·평방)
  - 최룡해·현영철·김격식·김영춘·김정각·리영길·손철주·렴철성·조경철·윤동현·김영철·박정천·윤동희·김택구·박동학·림광일·최부일·오일정·김경옥·리재일·라철일·홍영철 등 동행 관람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고경달(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정순원(황해남도수산관리국 산하 단위 지배인)·오순진(동림광산기계공장체육단 역기책임감독)에게 70회 생일상 전달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2.25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에 再선출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내각수상에게 축전(2.26,중통·중방)
- 2/27, 김정은 黨 제1비서,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2.27,중통)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광범기, 문경덕, 조연준, 홍승무 등 참가
  - 제3차 지하핵실험 성공 위훈자들, 2.27 평양체류일정을 마치고 출발(2.27,중통)
- 2/28, 김정은, 2.27 '진달래 싸파리니' 진달래아동기금 회장에게 '결혼 축하 선물'을 지재룡 駐中 北 대사 통해 전달(2.28,중방·중통)
- 2/28, 김정은 黨 제1비서, 2.28 리설주와 함께 北-美 농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류경정주영체육관) 관람 및 美 NBA 前 선수 '데니스 로드맨' 등 일행과 담화(3.1,중통·중방·평방)



#### ■ 기타 (대내 정치)

- 駐北 시리아 대사, 2.26 김정일 생일 즈음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2.26, 중통·중방)
- 양형섭, 김영일, 리룡남(무역상), 최창식(보건상) 등 초대
- 北,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 모습 등의 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4종) 발행(2.20, 중통)
- 김일성 시계표창: 59명, 김정일 시계표창: 19명, 김정은 표창장(黨 제1비서): 74명, 김정은 표창장(최고사령관): 22명 수여
- 최태복(黨 비서)·조연준(黨 제1부부장), 2.25 '3차 핵실험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군인건설자·일꾼들 숙소방문(2.25, 중통·중방)
- '3차 핵실험에 공헌한'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등을 위한 '생일축하연'(김정은 마련), 5.25 박도춘(黨 비서) 등 참가下 평양 고려호텔에서 진행(2.25, 중통)
- '3차 핵실험에 공헌한'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등, 2.25 인민군 무장장비관 참관(2.25, 중방·중통)
- 駐北 이란 대사, 2.25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리룡남·정영수(무역상·노동상)·김정숙(대외문화연락 위원장) 등 초대下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개최(2.25, 중통·중방)
-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2.27 최영림·최태복·박도춘·김평해·곽범기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28, 중통)
- 김정은 노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달 및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대책적 문제 토의

#### 나. 군사

##### ● 북한군, 대규모 동상환자 발생...탈영·약탈도 속출(종합)(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이 작년 말부터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군 기강 문란 등 부작용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군은 최근 '훈련 열풍'을 강조하면서 고도의 전투훈련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규모 군인 동상 환자와 탈영자·민가 약탈자, 구타 및 가혹행위, 함정 좌초 사고 등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북한군은 60~70대를 50~60대로 대폭 세대교체하고 있다"면서 "비대칭 전력은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은 가용 예산이 미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말함.

##### ● 北 "유엔에 '광명성 3호' 위성 등록"(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작년 12월12일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를 인공위성으로 등록





하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밝힘.

- 통신은 이날 "광명성 3호 2호기가 성과적으로 발사된 것과 관련해 조선은 '우주공간으로 쓰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 체약국으로서 위성등록을 위한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보도함.
- 이어 유엔우주사무국이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한 문건을 작성해 웹사이트 위성등록부에 게재했다며 "유관 국제법들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조선의 위성등록사업이 완결됐다"고 설명함.

● **軍 "北, 동해서 육·해·공 통합 화력훈련 징후"(3/3, 연합뉴스)**

- 북한군이 동해지역에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준비하는 징후가 우리 군 당국에 의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대규모 합동훈련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북한 전역에서 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초 동해지역에서 육·해·공군 통합 화력훈련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훈련기간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에 맞춰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훈련기간에 맞춰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함.
- 이어, 그는 "북한군은 작년 3월 남포에서 육·해·공군 합동 사격훈련을, 같은 해 4월에는 평양 남쪽 대원리에서 육군과 공군이 참여하는 화력훈련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 대규모로 하는 것 같다"고 말함.

다. 사회·문화

● **北, 산간지역 농업 확대 전망(2/2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앞으로 산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른바 '산간농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국토환경보호교류사의 김광주 상급고문은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2015년까지 퇴화된 경사지들에 임농복합경영을 확대할 데 대한 목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전함.
- 그는 "초기에는 산림 토지에 나무와 농작물, 약소, 산나물, 방목 등을 입체적으로 배합한 경영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확대해갔다"며 "농작물 지배에서는 강냉이(옥수수)대신 밭벼를 많이 심으면서 경사지의 특성에 맞게 작물배치를 다양화했다"고 임농복합경영의 성과를 소개함.

● **北 "위성 과학자·핵실험 공헌자 적극 따라 배우자"(2/25, 노동신문)**

-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과 제3차 핵실험(핵실험) 성공에 공헌한 애국자들의 투쟁정신과 창조 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전함.
- 신문은 이날 '핵과 위성을 가진 강국의 기상으로 최첨단 돌파전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됐다"며 이같이 강조함.

- 사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해 최첨단 돌파전을 벌여나감으로써 금속, 채취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응용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워야 한다"며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경제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고 주장함.

● **北, 아시아마라톤 우승 김금옥 환대(3/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일 아시아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고 귀국한 김금옥 선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환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통신은 이날 "제14차 아시아마라톤(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김금옥 선수가 조국에 돌아왔다"며 광범기 노동당 비서와 리영수 당부장, 리종무 내각 체육상 등이 비행장에서 맞았다고 전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해의 합작영화, 내달 미국 첫 상영(2/27, 연합뉴스)**

- 북한이 영국, 벨기에와 합작해 만든 예술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가 오는 3월 미국에서 처음 상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국제영화제와 샌프란시스코 CAAM 영화제에 공식 상영작으로 초청받았다고 이 영화의 웹사이트가 전함.

● **北 "올해 외국인 체육관광 선보일 것"(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육과 관광을 동시에 즐기는 이른바 '체육관광'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힘.
- 통신은 이날 '올해 조선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되는 전문관광은 미니골프관광과 체육관광"이라고 전했으며, "미니골프관광에는 여러 나라 애호가들이 평양 룡라인민유원지에 꾸려진 미니골프장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을 기본 일정으로 하면서도 명승지들에 대한 다양한 관광 활동들이 포함되게 된다"고 보도함.

● **北, 日대북제재조치 비난... "무자비한 징벌" 위협(2/28,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단체인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제재 조치를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함.

-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금 일본당국은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시험을 곁들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라며 "일본반동들은 총련 중앙 책임일꾼들의 '재입국 불허' 따위의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고등학교 지원제도 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만 배제하고 보조금 지출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북미 체육교류에 기대 표명"(3/1, 아사히신문)**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아무르주 정부계 기업과 합병기업을 설립하고 1천ha(10km<sup>2</sup>=302만5천평)의 토지를 확보했으며, 북한 근로자 수십명이 올봄부터 아무르주가 제공한 농기계로 콩, 메밀, 밀, 감자, 채소 등을 재배해 북한에 가져갈 계획임.

● **北언론, 김정은-로드먼 만남 대대적 보도(3/1, 노동신문 등)**

- 북한의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들은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방북 중인 전 미국프로농구(NBA) 유명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만났다는 소식을 주요 기사로 보도함.
-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고 전날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미국의 묘기 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와 조선체육대학 화불(홋불)농구팀의 혼합경기를 관람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함.
- 1면에는 김 제1위원장과 로드먼이 관중석에 나란히 앉아 환담하는 사진도 실렸다. 신문은 이어 2면에 김 제1위원장과 로드먼 일행이 전날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사진 2장과 함께 게재함.

● **北 "日, 군국주의 부활에 열 올려"...3·1절 맞아 비난(3/1, 연합뉴스;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3·1절 94주년을 맞아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반외세, 통일애국의 기치높이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사설에서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을 공공연히 기도하며 독도강탈 책동과 반공화국 고립압살 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전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일본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돼야 한다'는 글에서 "일본 반동들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을 반성하는 대신 군국주의 부활과 조선반도(한반도) 재침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올 1월 對中 곡물·비료 수입 급감(3/3, 연합뉴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북한이 올 1월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과 비료의 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일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2013년 1월 북한의 대중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중국에서 곡물 2천174t과 비료 2t을 수입했으며, 품목별로 보면 곡물은 밀가루 1천172t, 옥수수 540t, 두류 342t, 잡곡 120t 등이고 비료는 유안비료만 2t임.

■ **기타 (대외 일반)**

- 北 노동당대표단(단장 : 리영철 黨 부부장), 2.25 러시아 黨 중앙위원장 '게. 쥬가노브'와 담화(2.26, 중통)
- 정의의 러시아 黨 지도자(에스.엠.미로노브), 2.26 北 노동당 대표단(리영철 黨 부부장)과 담화(2.27, 중통)
  - 러시아 자유민주당 국가회의 제1부책임자(오브산니꼬브), 2.26 北 노동당 대표단과 담화(2.27, 중통)
- 【중통 논평】 미국의 '키 리졸브·독수리합동연습' 관련 '우리(北)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 미국은 그것이 초래할 후과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北 3차 핵실험은 1차적 대응조치불과' 지속강조 위협(2.28, 중통/조선에 대한 도발은 자멸을 의미한다)
- 【중통 논평】 3·1절 94주년을 맞으며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개편 움직임과 평화헌법개정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행사, 독도강탈책동 등' 거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국주의재침책동에 계속 매달릴 경우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3.1, 중통/일본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나. 6자회담(북핵)

● **北 "美, 우리 로켓·핵무기 사정권 안에 있어"(2/27,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27일 "미국이 이제는 우리(북한)의 전략로켓과 핵무기의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고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27일 밝힘.
- 이날 게재한 '바다 건너 한끝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우리 공화국은 자위적인 당당한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 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북한의 대외단체인 조국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소속의 한 개인이 작성한 이 글은 또 "만약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 책동에 미쳐 날뛰며 끝끝내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력한 군력으로 지구 상에서 미국이라는 악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것"이라고 강조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광명성-3호 2호기'를 인공위성으로 등록하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2.26, 중통)
- 최근 유엔우주사무소는 광명성-3호 2호기 등록과 관련 유엔공식 문건(ST/SG/SER.E/662)을 작성하여 유엔우주사무소웹사이트 위성등록부와 유엔전자문서고웹사이트에 각각 게재함으로써 위성등록 사업 완결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군사적 도발행위"(2/27,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 한미연합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에 대해 "노골적이며 계획적인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화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북침전쟁 연습소동을 벌여놓고 일촉즉발의 화약고에 불뿔을 던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논평은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의해 근 두 달간에 걸쳐 실전을 가상한 전쟁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며 "전면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함.

● 북한군, 서울 가상목표로 포사격훈련 실시(2/27, 연합뉴스)

-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북한군의 동계훈련 양상이 예년보다 공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북한군의 동계훈련 과정을 지금까지 평가한 결과 포탄 실사격과 공중기습침투훈련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전반적으로 동계훈련 양상이 공세적으로 변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밝힘.
- 북한군은 포병훈련 때 서울지역을 가상 타격목표로 정해 포 사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훈련에는 실탄이 아닌 콘크리트가 들어간 '연습탄'이 이용됨.

● 北 "한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 몰려온다" 위협(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8일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을 앞두고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며 전쟁 위협 공세를 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이날 '조선(북한)에 대한 도발은 자멸을 의미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흐름에 역행해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조선반도(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주장함.

- 중앙통신은 "우리(북한)의 이번 핵시험(핵실험)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 대응조치에 불과하다"며 "지금 우리 혁명 무력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최후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함.

● **北노동신문, 이명박 前대통령 퇴임 보도(3/2, 노동신문)**

- 북한이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사실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를 통해 주민에게 전함.
- 노동신문은 이날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최악의 흔적'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리명박이 마침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함.
- 신문은 "리명박 패당이 떠든 '원칙'이란 대화와 협력을 파괴하기 위한 '원칙'이었을 따름"이라며 "리명박은 집권 전 기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외세와 작당해 북침전쟁 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비난함.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러외무 "6자회담 재개가 유일한 북핵 해법">(2/25,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6자회담 재개가 북핵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인 '외교 아카데미'에서 행한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은 제재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한반도 주변 무력 증강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이 행한 핵실험을 비난하고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란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왔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의 신호도 (북한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다"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유감을 표시
- 라브로프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둬선 안되며 이미 채택된 대북 제재와 별도로 어떤 추가적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면서 "현재 유엔 안보리가 최대한 잘 조율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러한 조치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조준한 것이어야 한다"면서도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 추진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이는 추가 대북 결의안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그는 또 "대북 결의는 누군가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한 무력 제재를 허용한 유엔 헌장 제7장 42조를 대북 제재에 원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임.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대북 결의안은 반드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협상 외에 한반도 핵문제의 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
- 라브로프는 또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거나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대하는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국제적 군사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그는 "만일 총이 벽에 걸려 있으면 언젠가 발사되게 돼 있다"며 "무력이 증강될수록 상황이 군사적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음.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에 맞서 한국과 미국 등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미사일 전력 강화, 전술핵 재배치 등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경고하고 나선 것임.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러시아는 이 같은 상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논의가 강경 제재를 요구하는 한·미일의 입장과 적절한 제재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는 라중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 <임성남 중국 도착... "북한에 올바른 메시지 전달돼야">(2/27, 연합뉴스)

- 북핵 문제 협의차 방중 길에 오른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베이징에 도착했음. 임 본부장은 도착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안보리 조치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하려고 왔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북한에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북한이 더는 도발을 감행해서는 안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
- 임성남 본부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한중 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북핵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임 본부장은 28일까지 베이징에 머무르면서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조치 등을 논의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중국에 설명할 예정임.
- 한편, 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할 예정. 28일 오전에는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만나고 귀국

### ● <中 '양회' 변수... 대북제재 이달 말로 또 미뤄질듯>(3/3, 연합뉴스)

-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북수의 외교 소식통은 3일 "양회가 끝나는 3월 중· 하순은 돼야 유엔 제재결의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한·미·일이 추진 중인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적절한 수위의 제재' 카드로 맞서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는 2월을 넘기고 말았음.
- 중국은 중요한 결정을 양회와 당 대회 같은 주요 정치행사 이후로 미루



는 관행이 있는데다가 정치 일정이 시작되면 각 부처의 실무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경향을 보여왔음. 올해는 양회의 한 축인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強) 총리 체제가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이런 경향은 예년에 비해 강해질 가능성이 큼. 특히, 대북제재 입장은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뒤로 미룰 공산도 크다는 지적

- 안보리 의장국 임기 중인 2월까지 결론을 내고자 노력했던 우리 정부 역시 이미 2월을 넘긴 만큼 시간에 쫓겨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강력한 제재'라는 내용 쪽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시한을 정해놓고 쫓기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중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소식통은 "조속하게 처리하느라 내용이 약한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결의는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정부는 안보리가 취하게 될 강제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 원용을 관철시키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김숙 주 유엔 대사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한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엔 헌장 7장 원용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말해 원용 가능성을 낙관

## 나. 미·북 관계

### ● <미국 상원서 '北 핵확산 금지법안' 통과>(2/26, 연합뉴스)

- 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음. 미국 상원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투표로 통과시켰다고 AP 통신이 보도
- 법안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해 수호를 위해 이 지역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등의 세 가지 핵심 조항이 담겼음.
- 법안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음. 보고서 내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 권고도 요청.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음.
-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 넘겨질 예정이며 하원 가결 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됨.

- 미국 정부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는 제재를 논의 중임.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음. 북한은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음.

● <北 "美, 우리 로켓·핵무기 사정권 안에 있어">(2/27,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 "미국이 이제는 우리(북한)의 전략로켓과 핵무기의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음.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게재한 '바다 건너 한끝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우리 공화국은 자위적인 당당한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 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 북한의 대외단체인 조국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소속의 한 개인이 작성한 이 글은 또 "만약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 책동에 미쳐 날뛰며 끝끝내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력한 군력으로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악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것"이라고 강조
- 북한은 이어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6·25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공화국(북한)에 대한 침략책동에 더욱더 피눈이 돼 날뛰고 있다"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한편, 북한은 이달 12일 제3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뒤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하고 있음.

● <북한, 한반도 긴장국면 조성을 목적으로 미국 비난>(2/27, 로이터통신)

- 북한은 안보리의 지위를 남용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선동하고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켰다며 지난 수요일 미국을 비난했음. 북한은 2주전 지하 핵실험에 따른 UN의 추가제재에 직면해있는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하고 힘이 실린 경고를 받았음.
- 비평가들은 UN차원의 엄격한 제재 추진으로 이어진 지난 1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음.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인 서세평은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언급. 일주일전 북한대표단은 군축회의의 다자군축협상포럼 협상장에서 열띤 토론을 하던 중 "최종과외(final destination)"을 언급하며 한국을 위협한 적이 있음. 한편, 로라 케네디 미국대사는 수요일 북한의 구두공격에 반응하지 않았음.
- 그러나 한국 측 대표로 나선 권해룡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





에 "지체없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음. 권 대사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오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서대사는 "남조선이 내부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 대신 최소한의 인내를 발휘해 침묵하는 편이 더 낫다는 객관적인 조언을 하고 싶다"며 반박했음. 남북한은 1950-53년의 한국전쟁을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 협정으로 마무리해 기술적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전시상태에 있음. 그래서 그는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 권리를 가진 북한에 대한 "심화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주목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서대사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독자적인 평화적 우주공간 이용권리를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되며, 대북적대정책의 실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UN안보리의 권한남용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음. 또한, 그는 미국이 그동안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군사위성의 발사를 가장 많이 해 온 국가임을 언급하며, 미국이 "세계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최근의 지하핵실험에 대해 "세 번째 핵실험은 평화적 목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미국의 행위에 맞서 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였다"고 주장했음.
- 한편, 이문 길모어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연설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즉각적인 중단과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 참여를 북한에 촉구.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군축회의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10개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면서 북한에 핵개발 계획 중단을 촉구한 바 있음.

### ● <北, 스포츠로 얼어붙은 북미관계 물꼬 틀까>(3/1,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만남을 계기로 스포츠 교류가 북미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이번 '깜짝 이벤트'는 표면적으로는 김 제1위원장이 농구광이라는 개인적 취향에서 시작됐을 개연성이 크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의미와 영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 김 제1위원장이 로드먼 일행을 만나 북미관계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임.
- AP통신은 1일 로드먼과 동행한 뉴욕의 바이스(VICE) TV 대변인 알렉스 디트릭을 인용, 김 제1위원장이 로드먼에게 "이번 방문이 미국과 북한 간 해빙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 중앙통신도 김 제1위원장이 전날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마련한 만찬에서 북미 간 체육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함. 김 제1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로드먼과 만남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제스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 노동신문이 이날 1면에 게재한 농구경기 관람사진을 보면 북한의 대미 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김 제1위원장의 왼쪽 세 번째 자리에 앉아있었고 로드먼의 앞에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코카콜라'가 놓여 있었음.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 다양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외교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북한은 2007년과 2011년 미국에 태권도시범단을 보냈고 작년 6월에는 아시아에서 주로 활약한 선수로 구성된 미국 친교농구단이 방북한 적 있음.
- 사실 스포츠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뒤 줄곧 관심을 쏟아온 분야 중 하나임.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1월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내세우고 나서 체육, 교육, 예술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해왔음. 또 작년 11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한 뒤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외쳐왔음. 이처럼 북한이 내부적으로 스포츠 열기를 높이면서 외부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은 스포츠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비정치적 분야이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하지만 북한이 대북제재 문제로 미국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어서 스포츠 교류가 급격한 정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미국을 향한 비난 공세를 지속. 미국 국무부도 최근 로드먼 일행의 방북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힘.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과 로드먼의 만남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화해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처럼 스포츠 교류가 북미관계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로드먼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

#### 다. 중·북 관계

- <北매체, 中시진핑 동정에 한달 넘게 '침묵'...이유는>(2/28, 연합뉴스)
  -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가 최근 한 달 넘게 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눈길. 28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북한 매체는 지난달 23일(한국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후 이날 오전까지 37일째 시진핑 총서기의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음.
  - 시 총서기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는 베이징에서 열렸던 중국과 러시아 간 제8차 전략안보대화에 참석한 그의 발언을 조선중앙방송이 지난달 22일 소개한 것이 마지막. 북한 매체가 최대 우방인 중국의 최고지도자 활동을 한 달 넘게 소개하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임.



- 그동안 북한 매체는 시진핑이 2007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2010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의 동정을 꾸준히 보도해왔음. 특히, 작년 11월 시진핑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뒤에는 북한 매체에 그의 이름이 이들에 한 번꼴로 언급. 하지만 시 총서기에 대한 언급이 끊긴데는 최근 북한이 중국의 고위지도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북한 매체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후 중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다가 10여일 만에 중국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 행사 소식을 전했지만 예전처럼 중국 기사를 쏟아내지는 않고 있음. 북한 매체는 매년 2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관련 보도가 없었음.
- 작년 2월의 경우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 당시 리창춘(李長春)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의 고위인사가 참석했음.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 대사의 활동을 전하는 보도가 줄어든 것도 주목됨. 최근 한 달간 북한 매체가 그의 공개활동을 소개한 경우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그의 동상에 헌화하고 주북 외교단을 대표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
-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핵개발에서 '동병상련' 입장인 이란에 관한 기사를 매일 내보내고,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자를 자주 언급하는 것과 대비됨.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찬성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서운한 감정이 아직 매체 보도를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3월 초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強) 총리 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북중 간 협력관계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라. 일·북 관계

### ● <일본 "핵미사일 기술자 재입국 금지 검토">(2/27, 연합뉴스)

- 일본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27일 밝힘. 스가 장관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핵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할 때 일본 재입국을 금지시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앞서 일본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 등 조선총련 간부 9명의 재입국을 금지했음. 스가 장관은 미일 양국이 협의중인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제재가 가능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힘.



- <北, 日대북제재조치 비난…"무자비한 징벌" 위협>(2/2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단체인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제재 조치를 비난.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금 일본당국은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을 결코 들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라며 "일본반동들은 총련 중앙 책임 일꾼들의 '재입국 불허' 따위의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고등학교 지원제도 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만 배제하고 보조금 지출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돌격대로 나서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상전을 등에 업고 하수인으로 살아오는데 버릇 된 존재"라며 "일본은 우리 민족이 저들의 식민지적 지배를 숙명으로 감수하던 지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대변인은 "일본반동들이 지금처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에 계속 매달린다면 차례 질 것이란 전체 조선민족이 내리는 무자비한 징벌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일본정부는 앞서 12일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 제재로 허종만 조총련 의장 등 조총련 간부 9명의 재입국을 금지했음.

#### 마. 러·북 관계

- <"북한, 올봄부터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농장 운영">(아사히)<(3/1,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아무르주 정부계 기업과 합병기업을 설립하고 1천ha(10km<sup>2</sup>=302만5천 평)의 토지를 확보했음. 북한 근로자 수십 명이 올봄부터 아무르주가 제공한 농기계로 콩, 메밀, 밀, 감자, 채소 등을 재배해 북한에 가져갈 계획
  - 북한은 매년 반복되는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고, 아무르주는 소련 붕괴 후 농업이 쇠퇴한 탓에 발생한 대규모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신문은 풀이했음. 북한 농업성 대표단은 2011년 9월 아무르주를 방문해 총 20만ha 규모의 휴경지를 임차하는 협상을 벌였음. 또 평안남도과 아무르주가 친선관계 합의를 체결하기도 했음. 아무르주는 러시아 극동의 하바롭스크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1.6배인 36만3천700km<sup>2</sup>지만 인구는 83만 명에 불과

#### 바. 기 타

- <유엔, 北인권 조사강화…첫 별도기구 설립 확실시>(2/25, 연합뉴스)
  -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도 있게 조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처음으로 설립될 전망. 유럽연합(EU)은 별도의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설치가 포함된 결의안을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3월 22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 북한 인권 관심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이번 인권이사회는 이날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됨.

- EU는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일본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독립 조사기구(inquiry mechanism)의 창설을 제안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 소식통은 "EU는 결의안에 포함될 북한 인권 조사기구의 형식, 임무 등에 대해 북한 인권 관심국과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유엔 차원의 인권 조사기구에는 조사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나 진상조사단(FFM · Fact Finding Mission), 고위급 FFM 등이 있으며 통상 한시적으로 운영됨.
-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해 채택시켜온 EU는 이번에도 결의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북한 인권 조사기구의 형식, 임무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됨. 구체적인 내용은 EU가 결의안 초안을 관심국에 회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임. EU는 초안 회람 후 인권위 이사국을 상대로 지지 교섭을 벌이는 한편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공동 제안국 참여 의사를 타진할 예정임.
- 실제 결의안 제출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3월12일 예정)가 이뤄진 뒤인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다루스만 보고관 역시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별도 조사기구 설립을 요청.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
- 다른 소식통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데다 EU의 결의안 문안 작성이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음. 결의안 채택 이후 독립 조사기구가 설립되면 그동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명이 하던 북한인권 관련 업무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기구 차원에서 이뤄지게 됨. 조사기구의 구성, 활동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며 조사기구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유엔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 우리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EU가 주도하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
- 새 정부는 대선 공약집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정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사안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공동제안국 참여문제는 EU의 결의안이 나와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오바마, 박대통령 대북정책 인내하며 지켜보아야”>(2/2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 대북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공조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27일(현지시간) 제기됐음.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오바마 2기 한미관계-도전과 변화 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근 행동(3차 핵실험)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신뢰구축 계획이 일시 중단됐으나 한국 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그러면서 "미국은 박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북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 에번스 연구원은 이어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한 조율이 아주 잘 이뤄졌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상황을 꼭 염두에 뒀어야 한다"고 주장. 특히 그는 "한미 정상회담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잘 준비돼서 이뤄진다면 양국 대통령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에서는 핵억지력 확장을 비롯한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성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
  - 리비어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입장에서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존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실패한 만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해 북한 권력 핵심 인사와 만나도록 함으로써 제재와 인센티브를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러나 만약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금융제재, 의심선박 수색, 미사일방어(MD) 체계 확장,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해·공군력 증강, 군사훈련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리비어 연구원은 한일 관계와 관련,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무산은 양국 관계 뿐 아니라 한국 방어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후퇴였다"면서 "한일 양국의 새 지도자들은 화해의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양국 간 가장 성가신 문제로 '정교한 외교'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연장 협상과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및 차관보 대행을 지냈던 에번스 연구원은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대리대사,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등을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로 평가됨.





## 나. 한·중 관계

### ● <중국, 박 대통령 대북정책에 기대감>(3/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중국이 기대감을 드러냈음.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반도의 새 길을 제시해 중국은 이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밝힘. 화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유연한 대북 접근'을 언급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중국은 남북 쌍방의 대화 및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언급,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 다. 한·일 관계

### ● <朴대통령 "日, 역사직시하며 과거상처 치유 노력해야">(2/2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인 25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3국을 포함한 6개국 외교사절들과 차례로 단독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와 양자 간 외교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음. 박 당선인은 오전 취임식 이후 청와대로 이동한 뒤 오후 접견실에서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과 25분간 회동
- 이날 접견은 일본이 지난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정무관(차관급)을 파견,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
- 박 대통령은 접견실에서 아소 부총리와 악수를 나눴으며, 아소 부총리가 "한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고 축하 인사를 건네자 박 대통령은 "양국 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 주길 바란다"고 화답
- 박 대통령은 비공개 접견에서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만큼, 앞으로 국민정서에 맞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보다 견고한 우호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음. 그러나 박 대통령은 "양국이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사문제 등 현안이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이웃나라인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고 치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국 지도자들이 신중한 말과 행동을 통해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아소 부총리는 북핵 문제에 대해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긴밀한 협력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호응
- 박 대통령은 이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취임 경축 연회에 참석한



뒤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중국의 차기 부총리로 유력한 류옌둥(劉延東) 공산당 정치국원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 등을 논의. 류옌둥 정치국원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및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특별대표로 취임식에 파견되었고, 박 대통령을 만나 두 사람의 친서 원본을 전달했음.

- 한편, 박 대통령은 이어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관계 방안 등을 논의. 이사예프 장관은 오는 9월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을 초청하는 친서를 전달했음.
- 한편, 한반도 주변 4강 중 미국 특사단 접견은 오는 26일 이루어질 예정임.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특사단을 접견하는 등 11건의 정상급 환담 및 외교사절 접견 일정을 진행

#### ● <일본 "한국·호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2/28, 연합뉴스)

- 일본이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국이 반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 직속 기구인 안보 법제 간담회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위원장(전 주미 대사)은 최근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 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힘.
-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킴. 일본에서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주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이를 한국과 호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 야나이 위원장은 또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패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라고 비판했음. 그는 "수백km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깝다"며 "미국이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달라'고 하더라도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음.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안보법제 간담회를 설치, 안보기본법 제정 문제 등을 논의하게 했음.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정부 "日외무상 부당한 독도주장 유감">(2/28, 연합뉴스)

- 정부는 28일 일본 외무상이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음. 정부는 이날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신정부의 외



- 무대신이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훼손을 기도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난
-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 라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기도는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희생된 최초의 우리 영토란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음.
  -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에도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하루저녁에 해결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 일본 외무상이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뤄진 것임.

#### 라. 미·중 관계

##### ● <미중, 대북 제재 강화 합의>(아사히신문)<(2/26,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유엔헌장 7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복수의 안보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지난 주말 대북 강제조치의 근거 규정인 유엔헌장 7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미 실시된 대북 제재 결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제재 결의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음. 양국은 조만간 13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에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제시하고, 이르면 이번주중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계획
- 앞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중국이 "제재를 강화할 경우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는 데 반대했음.
- 이에 대해 미국은 과거 2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인용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새 결의안을 만들 경우 별도로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음. 앞선 2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2006, 2009년의 핵실험 직후에 나왔음.
- 둘 다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유엔 가맹국에 대북 제재를 의무화함.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사치품의 수출입 금지, 핵·미사일 계획에 관계된 개인·단체의 도항 금지, 자산 동결, 인도·개발 목적 외의 금융 지원 금지 등을 담았음. 아사히신문은 안보리의 새 결의에는 금융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라고 추측.
-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 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음. 이는 안보리가 취하게 될 강제 조치의 근거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으며, 특히 무력적 강제조치를 포함하는 42조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할 경우 대북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 <“미국·중국 외교장관 통화..북한 문제 협의”>(2/27, 연합뉴스)

-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음.
-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이 독일에 머무는 동안 중국의 양 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두 사람의 논의한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음.
- 앞서 케리 장관은 취임 직후인 이달 5일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13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음. 벤트렐 부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그는 이날 "안보리 북한 제재 논의가 2주 이상 지났지만 진전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 내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답했음.
- 한편, 미국과 중국은 최근까지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연일 협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미·일 관계

●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 준비절차 재개>(2/27, 연합뉴스)

- 오키나와(沖縄)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이전 준비절차가 재개됐음.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26일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어업협 동조합에 헤노코(邊野古) 연안부 매립 동의 신청서를 제출. 나고어협에는 후텐마 기지 이전 예정지인 나고시 헤노코 지역의 어민이 속해 있음.
- 기지 이전의 전제인 매립 허가 권한은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가 갖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의 동의를 받아야 나카이마 지사의 매립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나고어협에 매립에 동의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고어협에 속한 어민은 정부와 어업권 보상을 두고 이견차가 크긴 하지만 매립 신청에는 동의할 것으로 예상됨.
- 고히구라 히로시(古波藏廣) 나고어협 조합장은 "매립 예정지는 (어차피 미군의) 훈련 지구여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없다"며 "(매립 신청) 99%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음. 다만 헤노코 지구 맞은편에 있는 기노자촌(宜野座村) 어협이 자신들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매립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이나미네 스스무(稲嶺進) 나고시장은 "오키나와 주민이 모두 현재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데도 신청서를 제출한 정부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





고 강하게 반발. 결정권을 쥔 나카이마 지사도 일단 불쾌하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평소 지론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여론을 주의 깊게 살피다가 내년 1월 나고시장 선거 전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정부는 예상.

- 한편,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6년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2014년까지 헤노코 지구로 옮긴다는데 합의했지만 이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좀처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

## 바. 미·러 관계

### ● <미-러 외무 첫 회담...시리아 사태 해결 공동노력 합의>(2/27,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처음으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음. 케리 장관은 25일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유럽과 중동 9개국을 순방하고 있음.
- 27일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2시간 이상 이어진 존 케리 장관과의 대화가 "아주 건설적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회동을 "무게있는 실무회담"으로 평가
- 두 장관은 이날 회담 시간의 거의 절반을 시리아 문제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지난해 6월 말 제네바 '행동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문을 이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전했음. 그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 시리아 정부와 야권이 서둘러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
- 라브로프 장관은 시리아 사태 외에 이란 핵 프로그램, 북한 핵문제, 아프가니스탄 상황,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의 국제현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음. 북핵 문제와 관련 두 장관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음.
- 러-미 양자 관계에선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에서 숨진 러시아 입양아 막심 쿠지민(3세) 사망 사건으로 재발한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문제가 주요 화제가 됐음. 라브로프 장관은 케리 장관이 입양아 문제를 러시아 측이 억지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문제와 관련 투명성과 러시아의 이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
- 한편, 이날 러-미 장관 회동은 최근 들어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하고 북한의 핵실험 사태 논의를 위한 두 장관 간 전화통화가 제때에 성사되지 않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음.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러시아와 미국 관계는 지





난해 말 양국이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인권법을 채택하면서 한층 악화되었음.

- 미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대러 인권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채택. 마그니츠키법은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관리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도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러시아는 미국의 마그니츠키법 채택에 대한 보복으로 곧바로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 인권법을 입법한 바 있음.

#### 사. 중·일 관계

##### ● <중국, 아베 강력 비난... "흠친 사실 변하나">(2/25, 연합뉴스)

-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도둑에 비유해가며 거칠게 비난했음.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방미 기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1895년 전에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에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런 논리는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반박했음.
- 화 대변인은 이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나서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훔쳤다는 것이 변하는가"라며 "같은 논리로 일본이 불법으로 중국의 영토를 빼앗아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화 대변인은 또 15세기부터 1895년까지 어떤 국가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주권에 도전하지 않았다고 역공
- 아베 총리는 최근 대 중국 강경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음. 이에 중국도 아베 총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양국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게 팬 양상.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정당성이 부족한 중국 정부가 국민의 애국심을 앞세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강압, 협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중국 정부는 한 국가 지도자가 이웃나라를 공격하고 역내 국가 간 적대감을 부추기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맹비난했음.
- 한편, 화 대변인은 중국을 빼고 진행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에 일본이 참여할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해 "관련국들이 다양성과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포용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음.

##### ● <중국, 센카쿠 해역에 부표 설치>(2/26, 연합뉴스)

-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 부표를 설치했음.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당국이 중국 관할 해역에 부표를 설치했다"며 "이는



해상 및 기상 관측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 화 대변인은 부표 설치를 문제 삼는 일본을 겨냥, "이는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별 것 아닌 일을 갖고 큰일처럼 떠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중국은 작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선박과 항공기를 센카쿠 영해와 영공에 수시로 진입시키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실효 지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

### ● <中, 중일 해상안보 문제의 원인 일본에게 있어>(3/1, 인민일보)

- 2월 28일 오후에 열린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연성(耿雁生) 국방부 신문 대변인은 해상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본 기자회견에서 한 기사는 2월 20일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미국과 가진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본 자위대와 중국 군대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해상연락기제에 대해 미국 측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아울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방문 전에 중국을 놓고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음.
- 이에 정연성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해상 안보 문제를 중요시해 왔고, 이외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희망했지만 일본 지도자가 도발적인 발언을 종종 일삼아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군사적 사건을 부각시키며 의도적으로 군사적 대립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조. 또한, 일본은 중국 측 선박과 비행기의 관련 해역 내 운항 및 훈련에 대해 근거리 감시를 장기간 실시했으며 이것이 중일 해상 안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스스로의 언행을 규범화해 잘못된 발언을 멈추고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양자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 중국 국방부는 일본의 이른바 중국 군함이 일본 측 함정과 헬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연성 대변인은 이미 중국 군대의 엄정한 입장을 밝힌 바 진상은 매우 명백하다며, 일본 측의 발언은 사실에 맞지 않는 말로 이번 일로 일본 측은 중국 군대에 먹칠을 하고 의적으로 지역 긴장감을 조성하고 국제여론을 호도하길 위한 계략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밝힘.
- 또한, 정연성 대변인은 일본이 장기간 중국 측 선박과 비행기에 대한 근거리 방해 및 감시 업무를 실시해 중국 측 선박과 비행기에 해를 입혔으며 이것이 바로 양국 간 해상 안보 문제의 근원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아. 기 타

### ● <윤병세 "외교 우선순위는 美→中→日·러">(2/27,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별 외교적 우선순



위를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 순으로 제시했음. 윤 내정자는 27일 '우리가 외교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별 우선순위와 이유'를 묻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원유철(새누리당) 의원의 인사청문 사전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우선적 외교 파트너이며 중국은 미국 다음"이라고 밝힘. 그는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숙, 경제발전,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심화·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미국을 최우선적 외교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우리의 최대교역국,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중국의 경제적 비중,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감안해 중국을 미국 다음의 외교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변영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두 나라도 중요한 외교협력 파트너"라면서 "다만 일본의 경우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중요시하지만, 역사와 관련해서는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 그는 한반도 주변 4국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아세안, 유럽연합(EU),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순위를 꼽았음. 윤 내정자는 또 북핵 문제와 관련, 같은 상임위 박주선(무소속)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자료에서 "미·중 등 관련국과의 조율을 거쳐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을 추진하겠다"면서 "한·미·중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북핵문제 해결에 추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윤 내정자는 "정부는 기존 3국간의 민간·민관 대화체를 통한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정부 간 협력 방안도 꾸준히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 그러나 미중 전략대화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양자 대화체를 3자 대화체로 확대하는 것은 용이치 않을 것"이라고 답했음.
- 윤 내정자는 외교현안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우리나라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안정적인 원전연료 공급이 중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그는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 내정자는 이어 올해 진행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 "우리의 재정 부담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음. 또 일각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론에 대해 "현재 예정대로 원활히 추진 중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한미 간 협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음. 이밖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음.



● <“獨통일 신뢰서 비롯…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믿음줘야”>(2/27, 연합뉴스)

- 로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는 27일 남북한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들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파엘 대사는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통일대비 의원연구모임'(대표 정의화 의원)과 '통일미래포럼'(대표 주호영·조명철 의원) 초청으로 '독일 통일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특강
- 마파엘 대사는 독일 통일을 견인한 동방정책이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 유럽안보회의라는 다자 틀에서의 동서독 위치 강화, 동서독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한 뒤 "독일 통일의 결정적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신뢰야말로 독일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서독은 국경을 접한 프랑스·폴란드뿐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인 미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시했다"면서 "그런 신뢰를 몇 십 년에 걸쳐 쌓았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다른 나라의 위협이 아닌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 마파엘 대사는 "남북한이 대화를 시도하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중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및 주변국과의 신뢰프로세스 필요성을 거론했음.
- 마파엘 대사는 또 "어렸을 때는 통일이라는 문제가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독일의 통일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줬다"고 소개했다.
- '통일대비 의원연구모임'의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꼭 가야 할 길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통일 문제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